

好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이통3사… 통신비·5G가 변수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SKT 매출 17.5조 ‘던어라운드’

LGU+ 영업이익 8000억 돌파

KT 매출 23조 3873억 기록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인터넷TV(IPTV) 등 신사업 호조로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올해 정부가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5세대(5G) 구축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 실적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통3사, “실적 던어라운드 성공” 평가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7조5200억원, 영업이익 1조5366억원, 순이익 2조657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미디어,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사업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해 3년 만에 매출 던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영업이익은 미디어 사업 성장과 11번가 수익성 개선 영향으로 0.1% 증가하고 순이익도 SK하이닉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지속적인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이익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1%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000억원을 돌파하는 성적을 거뒀다. 총 매출은 12조2794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단말 판매를 제외한 실질적 매출인 영업 매출은 9조462억원으로 4.2% 늘었다.

다만, KT의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 상향과 평창 동계올림픽 5세대(G) 시범

서비스 관련 일회성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1조3757억원으로 4.5%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은 인터넷·인터넷TV(IPTV) 등 핵심 분야 사업의 성장과 미디어·금융·부동산 등 자회사 매출 증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 증가한 23조387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 매출이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실적은 보편요금제·5G가 ‘변수’

이동통신 3사 모두 미디어와 인터넷 매

출 등 신사업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한 모양새다. 그러나 잘 뜯어보면, 주력사업인 이동통신 매출은 한계에 직면했고, 마케팅비 등이 늘어나 갈수록 수익성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5%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올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신 3사의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3조932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459억원으로 9.4%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영향이 본격화한 시점이다. 가장 부진한 성적을 받은 KT는 영업이익 감소 원인으로 선택약정 할인 상향과 평창올림픽 비용 등을 꼽았다.

4분기 마케팅비도 3.3% 늘어난 2조440억원으로 과열 기준인 2조원을 넘었다. 25% 요금할인으로 가입자가 솔리는 것을 막고, 아이폰8·X(렌)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된 영향이다.

올해는 보편요금제 적용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등과 5G 투자 본격화로 인해 실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

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GB·음성 200분을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3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낮추는 셈이다.

SK텔레콤의 유영상 CFO(최고재무책임자)는 “25% 요금할인 등의 영향으로 올해 별도 기준 이동전화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 전반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등 강력한 변화를 추진하고 시스템화된 요금제를 제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5G 투자도 본격화된다. 다만, 본격적인 5G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설비 공용화 문제, 5G 주파수 경매 등에 구체적인 비용과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비투자(CAPEX)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의 김대희 5G 전략담당은 “5G 투자규모는 LTE 장비와 5G 장비가 구조 차이가 있고 가격이 다르며, 타사도 업체 선정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kkni@metroseoul.co.kr

〈서민금융진흥원 설 연휴 자금지원 상세계획〉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지원방식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대출한도	·우수시장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 (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대출기간	·5개월 (명절 전 2개월 ~명절 후 3개월까지)
대출금리	·연 4.5% 이내 (평균 3.3%)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설 대목 中企 긴급자금 12.5조 풀다

금융당국, 민생지원방안 발표

산업·기업銀, 특별자금 대출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단축도

금융 당국이 설 연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선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일을 최대 5일 단축한다. 서민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조기 상환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총 12조5000억원 규모의 중기 지원 자금은 설 연휴 30일 전인 1월 17일부터 설 이후인 3월 5일까지 집행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한다. 우수시장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연 4.5% 이내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현재 가맹점대금 지급은 카드사용일로부터 3영업일이 걸리는데, 설 연휴기간 (2월 15~18일) 전후엔 카드사용일로부터

1~2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인하의 영세가맹점 203만9000개, 연 매출 3~5억원의 중소가맹점 20만6000개로 총 224만5000개다. 기존 대비 카드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해선 연휴기간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출의 경우 설 연휴에 조기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자동 연장된 만기 때 따라 이달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엔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엔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이달 14일에 우선 지급한다.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한다. 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추후 금감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보안관제 현황 및 사이버공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터넷뱅킹 등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4000여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

/채신화 기자 csh9101@

“공인인증서 폐지 공공서비스부터 점진 시행을”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다양한 인증서 난립 가능성
안전성 평가 기준 시행해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여론 수렴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차위는 지난 1~2일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해 집중 토론하는 1박2일 간의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유도 방안, 빅데이터 구축·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2차 해커톤에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부처가 참여해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주제 해커톤에 대해 이상용 4차위 사회제도혁신 위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개인



2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하는 장석영 4차위 지원

/연합뉴스

정보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로 분류됐던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를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가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포함되거나 일부는 ▲의명정보로 분류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의명정보를 규정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조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은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발표했지만 다양한 문제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연착륙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서비스부터 시범사업을 구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 아래 해커톤에서는 ▲전자 서명 정의와 법적 효력 재정의 ▲인증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의무화 해제 ▲관련 법령을 시행령 이상에서 둘 것 ▲국민이 불편 겪지 않는 단계적 도입 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난립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인증서 안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수단 제한에 대한 규정이 감독규정에 있는데 이를 방지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오남용이 이뤄질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시행령 이상의 법령으로 마련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없음에도 정부기관들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

현대차그룹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4조 조기 지급

소비 진작·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447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상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조3964억원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447억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설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4000여 협력사의 자금



현대차그룹.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80억원, 1조17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약 447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설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이번 설에도 직원들이 약 2500여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우리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양성원 기자 ysw@